

박근혜의 파업 비난과 협박은 위기감의 발로

# 흔들리는 박근혜를 몰아붙여 성과연봉제를 막아내자

9월 27일 시작한 파업은 공공운수노조 출범 이래 최대 규모 동시 파업이다. 파업에 철도나 서울 지하철 등은 조금씩 파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파업 참가율이 높기 때문이다. 그만큼 분노가 크다.

지난 3년간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장기근속자 임금 삭감(임금피크제), 수당 삭감, 복지 축소 등에 시달려 왔다. 성과연봉제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력한 이유다.

성과연봉제는 전반적인 임금비용 절감을 위한 박근혜 노동개혁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올해 공공·금융 부문에서 성과연봉제를 관철하고, 이를 디딤돌 삼아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려 한다. 박근혜 정부가 불법을 감수하며 공기업들에서 이사회 강행 통과를 밀어붙인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는 24일 직접 공공운수노조 파업 등을 거론하며 “노동계 연쇄 파업은 국가적 위기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동부장관 등이 나서 근거도 없이 파업이 불법이라며 직위 해제 협박을 하거나, 현대차 파업에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암시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 탓을 할 자격이 없다. 경제 위기를 아무 잘못도 없는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혼란을 가중시키는 주범도 박근혜 정부고, 잇따른 정권 실세 부패 추문으로 혼란과 위기에 빠져 있는 것도 청와대 자신이다. “비상시국”이니 내수 살리기를 위해 골프를 치라는 박근혜의 지시는 박근혜의 경제 살리기가 누구의 경제를 살리려는 것인지 잘 보여 준다.



노동자들은 이런 뻔뻔한 정권을 위해 노동 개혁 정책들을 단 하나라도 수용할 이유가 없다.

### 레이덕

최근 정부는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명분없는 부검 시도, 세월호특별법 개정 방해 등 악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힘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은 지금 위기다.

최근 미르·K스포츠 재단 스캔들은 최

순실의 국정 농단만이 아니라 박근혜 본인을 위한 불법 정치자금 모금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턱밑까지 치부가 파헤쳐지고 있다. 여권 내 균열이 커진 방증이다. 우병우 폭로에 앞장섰던 언론이 <조선일보>라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전형적인 레이덕 위기다. 레이덕은 4월 총선 참패 후 점점 심해져 왔다. 박근혜는 총선 후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을 부각하며 지지율 회복을 노렸지만, 오히려 구조조정의 속도와 방법, 책임 소재 등을 둘러

싸고 지배계급 내 이해관계 다툼만 거세졌다. 여름에는 안보 이슈를 꺼냈지만, 사드 배치 문제는 텃밭이라던 경북 성주에서 대대적인 저항이 직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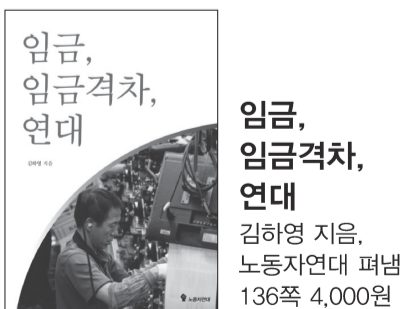
한마디로 지금 박근혜는 뭘 해도 다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다. 사드에 이어 한진해운 사태, 경주 지진 사태로 영남이 오히려 지지율 추락의 진앙지가 되고 있다.

물론 만만찮은 경제 위기 때문에 저들은 노동자 공격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궁지에 몰릴수록 대중을 상대로 가시둔힌 독설이나 퍼붓고 측근에 더욱 의존하는 행태는 반감만 키울 뿐이다. 대중에게 ‘간신배’(내시)라고 경멸이나 받던 사람을 집권당 대표로 앉히고는 초호화 만찬을 베풀며 좋아하는 모습은 안 그래도 이 정권의 부패와 독선에 염증을 내던 사람들에게 혐오와 분노만 더 키웠다.

이처럼 불안과 분노가 광범하고 레임덕 위기인 상황은 노동자 투쟁에도 더 힘을 준다. 9월 23일에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 저지 대규모 하루 파업을 벌였고, 현대차지부도 12년 만에 전면파업을 벌였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파업 효과를 높여 정부를 압박할 때다. 노동자들의 저항이 거세지면 레임덕 위기는 더 가속화될 수 있고 성과연봉제 저지 목표를 성취할 가능성도 커진다.

이번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은 노동계 전체 투쟁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단호하게 위기의 박근혜를 몰아붙이면, 다른 부문의 더 많은 노동자들과 청년들의 지지와 연대도 확대될 수 있고 그들 스스로도 투쟁에 나설 것이다.

### 추천 소책자



**임금, 임금격차, 연대**  
 김하영 지음, 노동자연대 펴냄  
 136쪽 4,000원

구입문의: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  
 https://workerssolidarity.org/

## 철도 파업 참가자 직위해제 즉각 철회하라

27일 공공부문 노조들이 파업에 들어가자 철도공사 사측은 이번 파업을 “불법”이라고 비난하며 직위해제를 단행했다. 철도노조의 중앙위원회, 지부장 등 1백 명이 직위해제 됐고,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합동브리핑까지 열어 철도공사 파업을 불법이라 공격했다. 그런데 불법인 이유로 “파업이

임단협과 무관한 성과연봉제에 국한돼 추진”됐기 때문이라고 궤변을 늘어 놓았다.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을 교섭하는 것이 임단협의 핵심 사항인데, 임금체계를 성과연봉제로 바꾸는 것이 이와 무관하다니 말이다.

철도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직위해제는 정당한 파업을 위축시키기 위한 명백한 탄압이다. 간부들에 대한 직위해제와 파

업 참가자 업무복귀 명령·징계 위협에도 노동자들의 파업 열기는 상당히 높다. 철도공사 사측의 발표를 봐도 파업 참가율은 2013년 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부산교통공사 사측도 파업참가자 8백 50여 명에 대한 직위해제를 단행했지만, 노동자들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고 결국 하루만에 철회했다.

# 성과연봉제는 무엇을 노리는가

효율성·서비스 질·청년 일자리를 위한다는 정부의 거짓말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성과연봉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은 경제 회복을 발목 잡는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한다.

그러나 성과연봉제가 전체 사회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을 낳는 증거도 없다. 경쟁을 강화한다고 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성과주의를 강화할 경우 자포자기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기도 한다.

또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공공부문에서 경쟁 강화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킨다. 주된 목표가 서비스 질 개선보다는 비용 절감에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성과주의 강화로 재정지출을 줄였는지도 뚜렷하지 않다. 경제 위기 탓에 공공서비스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기도 했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연공서열제(호봉제)와 더 많은 재정 지출(세금)이 경제 성장에 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연공서열제는 일본의 전후 재건 과정에서 도입되기 시작돼 1960년대에 한국에 도입됐다. 두 나라 모두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에 연공서열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낮은 초임을 정당화하는 한편, 숙련 노동력을 붙잡아 두는 효과적인 유인책이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초임을 인상하고 인사고과도 부분적으로 약화시켜 임금을 늘려가자 이런 이점은 차츰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성장이 둔화하자 투자 동기가 약화됐고, 인건비(임금) 절감이 '효율성'을 높이는 주된 방식이 됐다.

다른 서구 나라들에서도, 1970년대 이후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하자 가장 먼저 공공부문을 공격했다. 정부는 재정 지출 즉, 공공부문의 비용(재정지출)을 줄여 두 가지 효과를 내려 했다.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기업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을 억제해 민간 기업에서도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억누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다. 일부 공기업의 경우 아예 민영화해서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처럼 노동계급에 대한 지배자들의 계급투쟁이라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도 본격화됐다. 그러나 이런 조처들이 추진된 지 수십 년이 넘었는데도 경제가 회복되는 커녕 오히려 더 깊은 위기로 빠져들었다.



## 경제 위기

그럼에도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려 한다. 성과연봉제 도입이 실제로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지는 불확실해도, 불황 속 경쟁에서 기업(주)들이 살아남으려면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수밖에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임금체계 개편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약속은 지켜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지금 같은 불황 속에서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하는데 정부의 우선순위는 정반대로 비용(재정-세금) 절감에 있기 때문이다.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늘릴 수 있는 일자리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만든 일자리는 저임금 비정규직(혹은 무기계약직) 일자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최근 조선사들이나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듯, 기업 부실에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사주들은 별 책임도 지지 않는다. 대기업 이윤의 일부인 사내유보금만 해도 수백조 원에 이른다. 자본주의와 기업주들이 불러 온 경제 위기에 애먼 노동자들의 임금을 문제 삼으며 책임 운운하는 것은 가당찮은 억지일 뿐이다.

요컨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은 재정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기업주들의 비용(임금과 세금)을 줄여 주려는 시도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성과주의 강화는 장치 '저성과자 퇴출제' 등 해고를 쉽게 하는 발판 구실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이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이 투쟁은 노동계급 전체를 위한 투쟁이다.

정의당,  
성과연봉제 반대  
“정의로운 파업”

더민주당,  
당론 채택 못 해

9월 26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은 고용노동부에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추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성과연봉제 추진은 대세'라며 귀를 닫고 '불법' 파업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야당들은 정부 비판에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 파업을 대하는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파업 집회에 참가해 이번 공공·보건 부문 파업을 “정의로운 파업”이라고 적극 지지를 표명하며, 노동자들과 함께 “저성과자 해고제와 성과연봉제 반드시 철폐시켜 내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당 원내대표 이상호는 이 파업으로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3단계 파업 대책'을 제시했다. 정부가 먼저 '성과연봉제 시행 시기 유보' 발표를 하고,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 중단 노력'을 할 것, 이후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위한 후속 대책 논의'를 하자는 것.

더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정부의 '일방성'이나 공공성 훼손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이 당은 '성과연봉제 일방 강행 반대'조차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더민주당 내에서 성과연봉제를 지지하는 견해가 주류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정권의 위기를 적극 이용해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싸우면 성과를 낼 수 있는 때다. 그러려면 굳건하게 투쟁해 정부가 물러서도록 더 큰 압박을 가해야 한다.



노동자 정치 신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 연대** 를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http://wspaper.org>